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 방안

2017. 12.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I. 검토배경	1
II. 규제체계 및 자산운용업 현황	2
III. 향후 정책방향	11
IV. 추진과제	12
1. 공모펀드 신뢰 강화	13
2. 역동적인 사모펀드 시장 구축	22
3. 기타 현장 밀착형 제도개선	25
V. 향후 추진일정	27

I. 검토 배경

- '03년 간투법, '07년 자본시장법 제정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에 힘입어 '글로벌 수준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
-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위에 우리 자산운용시장은 수탁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빠른 외형적 성장을 시현
 - 최근 5년간 수탁고는 66.0%, 회사 수는 132.1%, 임직원 수는 53.3% 성장했으며, 이는 여타 업권에 비해 압도적인 성장세
 - * 수탁고(조원) : ('12년말) 618 → ('17.9월말) 1,026 (66.0%)
 - * 회사 수(개) : ('12년말) 84 → ('17.9월말) 195 (132.1%)
 - * 임직원 수(명) : ('12년말) 4,625 → ('17.9월말) 7,090 (53.3%)
-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사모 펀드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자산운용시장 내적인 한계점도 상존
 - 공모펀드는 부진한 수익률, 수익률과 무관한 보수 수취 등으로 투자자의 신뢰가 저하되어, 수탁고가 감소·정체
 - * 공모펀드(조원) : ('05)132.5 ('07)222.8 ('15)213.8 ('16)212.2 ('17.9월)221.5
 - * 사모펀드(조원) : ('05)84.3 ('07)96.9 ('15)203.8 ('16)253.0 ('17.9월)289.1
 -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나, 글로벌 수준에는 미흡한 수준
 - * GDP 대비 헤지펀드 순자산 규모('16년 기준)
: (한국) 0.3%, (미국) 11.0%, (영국) 12.6%

⇒ 자산운용시장 성장의 과실이 일반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

- 공모펀드의 '투자자 신뢰 제고', 사모펀드의 '역동적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검토
- * 그간 「자산운용업 육성 TF」(팀장: 자본시장국장)를 통해 개선과제들을 폭넓게 논의

- 1 -

II. 규제체계 및 자산운용업 현황

1 규제체계 현황

- ◇ 펀드 규제체계를 관통(貫通)하는 '기본 철학'은 시장참여자 등 시장의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임
 - '일반투자자 시장'으로서 공모펀드는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되, 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제 합리화
 - '전문가 시장'으로서 사모펀드는 '창의'와 '혁신'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진입·운용규제를 대폭 완화

가. 공모펀드

- 공모펀드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펀드 규제원칙' 등 국제기준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화된 규제를 적용
 -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내부통제기준 제정, 펀드재산 별도보관관리, 감독기관에 의한 인가·감독 등
-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분산투자 규제·채무보증 금지 등 사모 대비 강화된 규제를 적용 중

· 분산투자 규제 : 동일종목 증권 투자는 펀드자산의 10%까지 허용
· 운용사·펀드 분산 : 동일 운용사 펀드에 대한 투자는 펀드자산의 50%까지, 동일 펀드에 대한 투자는 20%까지 허용(원칙)
· 금전 대여·차입, 채무보증, 담보제공 : 원칙적으로 금지
· 공시 의무 : 자산운용보고서, 수시공시 등 강화된 규제 적용
· 환매 : 15일내 환매, 환매청구된 펀드를 자기계산으로 취득 금지(원칙)

- 다만,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 수요(needs) 등을 반영하여, 규제완화를 실시
 -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적은 경우 관계인 인수 허용,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 확대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

- 2 -

나. 사모펀드

- 전문투자자 시장인 점을 감안하여 사모운용사의 자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공모펀드 대비 대폭 완화된 규제를 적용
 - 분산투자 규제, 금전 대여·차입 및 채무보증 금지, 공시 의무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들을 미적용
 - 다만, 전문투자자 시장이더라도 계열사 발행 증권 취득제한, 관계인 증권 인수 제한 등 최소한의 규제는 적용
- 아울러, 사모펀드 시장이 '전문가 시장'으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 및 운용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 중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는 진입규제, 펀드 설립규제, 운용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여 자율성 제고

- **규율체계**: 3개(일반사모, 헤지펀드, PEF) → 2개(헤지펀드, PEF)로 단순화
- **진입**: 인가 → 등록제 전환, 자본금 요건 완화(60억원→20억원)
- **펀드설립**: 사전등록 → 설립 후 2주 내 사후 보고
- **운용**: 투자대상별 펀드 설정 → 부동산·증권 등 다양한 자산 투자 허용
- **판매**: 전문투자자 대상 광고 허용, 매매·중개업 라이선스 없이 직접판매 허용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경영권 참여를 통한 수익창출이 목적인 만큼 주목적 규제 적용을 유지하면서 일부 규제 개선
 - * (예) (기존) 다중 SPC 설립금지, 자산 5%내 증권투자 가능
→ (개선) **복층 SPC 설립 허용**, 자산 **30%내 증권투자** 허용

⇒ 그간의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우리 자산운용 시장은 '글로벌 수준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

- * 현행 자본시장법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펀드 규제원칙' 등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을 충실히 반영

참고 공·사모펀드 규제체계 비교

1 펀드 운용 규제

자산 종류	내 용		공 모	사 모	
증 권	동일종목 증권 투자 : 펀드자산 10%까지		○	×	
	① 개별 펀드 기준 : 동일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10%까지 투자가능		○	×	
	② 운용사 기준 : 동일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20%까지 투자가능				
	계열사 발행증권	주식	① 개별 펀드 기준 : 자산 25% ② 운용사 기준 : 주식 투자가능 금액의 5%	○	○
	취득제한(886)	주식의	계열회사 전체가 해당 운용사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까지 가능	○	○
파 생 상 품	자기 또는 관계인(주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펀드자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금지(법885)		○	○	
	적격 요건(880조5)을 갖춘 자와만 장외파생상품거래 허용		○	×	
	동일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금지		○	×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금지		×	× (400%)	
	기초자산중 동일법인발행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자산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금지		○	×	
부 동 산	1년 이내 처분 제한		○	○	
	개발사업 시행전 처분 제한		○	○	
	(금전대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펀드 순자산총 액의 100%까지 대여 가능		○	○	
	(금전차입) 부동산펀드의 경우 펀드순자산 총액의 200%까지, 부동산 펀드가 아닌 경우 펀드내 부동산가액의 70%까지 차입 가능		○	× (400%)	
	동일 운용사의 펀드에 펀드자산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금지		○	×	
펀 드	동일 펀드에 펀드자산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금지		○	×	
	동일 펀드 발행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금지		○	×	
	투자금지	1. 재간접펀드 2. 사모펀드에 5%초과 투자하는 행위 금지	○	×	
기 타	펀드 자산에 편입된 증권총액의 50%를 초과하여 RP매도 거래 금지		○	×	
	(증권대여) 펀드 자산에 편입된 증권총액의 50%를 초과하여 대여금지		○	×	
	(증권차입) 펀드자산의 20%를 초과 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행위 금지		○	×	
	(금전대여) 원칙 금지 * 다만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PEF)의 금전대여가외인에 따라 가능		○	×	
	(금전차입) 원칙 금지		○	× 순자산 400% 가능	
	펀드 자산으로 펀드외의 자를 위해 채무보증이나 담보제공 금지(법8835)		○	×	
	이해관계인과 거래 제한(법884)				
	① 운용사 임직원, 대주주,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 (각각의 배우자 포함)		○	○	
	②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펀드의 관계 판매회사 (30% 이상 판매)				
	③ 운용사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② 환매 관련 규제

원칙	내용	공모	사모
마라카적 적용 (법 5236(1))	환매 청구 이후 산정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
금전 지급 (법 5235(5))	펀드 자산의 범위 내에서 자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 으로만 환매 지급 가능	○	×
15일 이내 지급 (법 5235(4))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계약상 환매소요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
자기거래 금지 (법 5235(6))	환매청구 받은 펀드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취득하게 할 수 없음	○	×
단기투자 환매수수료 (법 5236(2))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 부과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등을 기준으로 부과 가능	○	○

③ 공시 관련 규제

종류	주기, 공시 방법 등	공모	사모
자산운용 보고서 (법 588, 영 592(4))	3개월, 기준일부터 2개월 내 직접 또는 전자우편 교부	○	×
수시공시 (법 589, 영 593(3))	수시, 법령상 3가지 방법 모두 이행	○	×
장부서류 열람 및 공시 (법 591(1), 영 595)	투자자 서면 청구 시	○	○
집합투자재산 보고서(법 590)	매분기 종료후 2개월 이내 수시 (2개월 이내)	영양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 및 협회에 제출 펀드 회계기간의 종료,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 종료, 해지 또는 해산이 발생한 경우 금융위 및 협회에 결산서류 제출	○ ×
집합투자계약 공시(법 591(3))	항상, 홈페이지 등	집합투자계약을 공시	○ ×
기준가격 공시 (법 5238, 영 526(2))	원칙적으로 매일 공시	○	×
자산보관 보고서 교부 (법 5248)	수시 (2개월 이내), 판매사가 직접 또는 이메일	○	×

2 자산운용시장 현황 및 문제점

가. 우리 자산운용시장의 현주소

- 자산운용시장은 수탁고, 회사수, 임직원수 측면에서, 은행 등 여타 금융업권을 압도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
- 특히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은행 (△1.8%), 보험(△6.3%) 등과 달리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

금융업권별 현황('12년~'17.9월)

	자산운용	은행	보험(생명+손해)	저축은행
·수탁규모*	66.0% (618조→1,026조)	35.9% (2,031조→2,761조)	50.4% (726조→1,092조)	16.6% (49조→58조)
·회사수	132.1% (84개→195개)	5.6% (18개→19개)	3.6% (55개→57개)	△15.1% (93개→79개)
·임직원수	53.3% (4,625명→7,090명)	△1.8% (113,294명→111,211명)	△6.3% (62,155명→68,261명)	14.2% (7,928명→9,050명)

* 자산운용업은 펀드+일일 규모 기준, 은행 등 여타금융기관은 총자산 기준

- 국제적으로 비교하더라도 미국, 프랑스 등에 이어서 세계 13위 수준으로 발전하는 등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

· '16년말 기준 한국의 펀드순자산 규모는 3,498억불 수준으로 미국(18조 1,671억불) 등에 이어 13위 수준(ICI: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지역별 펀드순자산 규모('16년말 기준)

지역/국가 (순위)	순자산액 (USD십억)	점유율 (%)	지역/국가 (순위)	순자산액 (USD십억)	점유율 (%)
미국(1위)	18,167.1	54.2	아태지역	4,111.7	12.3
미국(1위)	16,343.7	48.8	호주(4위)	1,613.0	4.8
캐나다(8위)	996.1	3.0	중국(7위)	1,172.2	3.5
기타	827.3	2.5	일본(11위)	652.3	1.9
유럽	11,085.1	33.1	한국(13위)	349.8	1.0
룩셈부르크(2위)	3,367.3	10.0	기타	324.4	1.0
프랑스(3위)	1,806.3	5.4	아프리카	145.8	0.4
기타	5,911.5	17.6	합계	33,509.7	100

* ICI(Investment Company Institute, 미국자산운용협회)

□ 펀드시장 규모는 총 511조원('17.9월 기준)으로 공모펀드 222조원, 사모펀드 289조원 수준

- 공모펀드시장은 '07년말 223조원 규모에서 금융위기 이후 수탁고가 축소되었다가, 최근 금융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
- 다만, 금년(주가상승으로 수탁고가 증가)을 제외할 경우, 단기 대기성 자금인 MMF 이외의 공모펀드 수탁고는 정체·감소
- 공모펀드 내에서도 은행 등 전통적인 판매방식보다는 거래 편의성이 우수한 ETF가 증가하는 등 차별화되는 양상
- 사모펀드시장은 기관투자자의 투자 확대, 신규 운용사 진입 확대 등으로 폭발적인 성장 → 공모펀드 수탁고를 추월
- 최근 5년간('12년말~'17.9월말) 사모펀드 수탁고가 133.9% 성장
 - *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일반법인 제외)의 사모펀드 투자규모: ('15.12월) 151.8조원 → ('16.12월) 189.9조원 → ('17.9월) 212.9조원

공모·사모펀드 현황(단위: 조원)

	'05년	'07년	'12년	'15년	'16년	'17.9월
·공모	132.5	222.8	186.3	213.8	212.2	221.5
- MMF	64.3	46.2	62.0	86.1	87.2	84.8
(MMF 제외)	68.2	176.6	124.3	127.7	125.0	136.7
- ETF	0.4	1.2	14.7	21.6	25.1	30.1
·사모	84.3	95.7	121.3	199.8	250.2	289.1
(공모/사모 비율)	157%	233%	154%	107%	85%	77%

* 순자산 기준

- 특히, '15년 사모펀드 제도개선 이후, 신규 사모운용사의 진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측면
- * 사모펀드 규제정비('15.10월) : 등록제 전환, 자본금 요건 완화(60→20억원)

자산운용사 진입 및 퇴출 현황(단위: 개사)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9월
자산운용사	69	80	82	84	84	86	93 (20)	165 (91)	195 (120)
(진입)	6	11	3	4	0	3	7 (6)	72 (72)	30 (29)
(퇴출)	-	-	1	2	0	1	0	0	0

* 강제퇴출, 합병, 자진폐업 포함, ()안은 전문사모운용사

- 7 -

나. 평가 및 한계

[1] 공모펀드 시장 : 투자자 신뢰 저하

◇ 글로벌 수준의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수익률, 수수료 불만 등으로 '투자자 신뢰 저하' 문제 상존

- (수익률 부진) 공모펀드 부진의 일차적 원인은 위험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예금보다 유의미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한데 기인
 - 금융위기 과정에서의 대규모 손실 경험, 주식시장 정체 등에 따른 부진한 수익률 등으로 투자자가 공모펀드를 외면

예금·공모펀드 연간 실질수익률 비교(세금제외, 단위: %)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9월
공모펀드(A)	△27.40	41.13	10.44	△9.04	7.82	2.87	0.95	2.34	1.91	8.12%
예금(B)	5.98	3.85	3.58	3.96	3.48	2.81	2.45	1.78	1.54	1.54%
A - B	△33.38	37.28	6.86	△13.00	4.34	0.06	△1.50	0.56	0.37	6.58%

- (수수료·보수 불만) 손익과 무관한 판매수수료 수취, 수익률 대비 높은 보수(판매·운용) 등으로 투자자의 불만이 가중

- (판매수수료) '17.9월 기준 판매수수료율은 0.85%로 인하 추세이며, 주요국과 비교시에도 유사 또는 다소 낮은 수준이나,
 - * 판매수수료(%) : 미국(0.7), 일본(0.65~2.96), 영국(2~3), 한국(0.85)
- 판매단계에서 형식적 투자자문, 단순 상품설명 등 제공받는 서비스에 비해서 과도한 부담이라는 불만도 제기

판매수수료를 추이 (단위: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9월
판매 수수료	0.93	0.92	0.89	0.89	0.87	0.85	0.84	0.85

- **(판매·운용 보수)** '17.9월 기준, **판매보수율 0.352%, 운용보수율은 0.273% 수준**으로 지속 인하 추세
- 해외와 비교시, **판매보수는 다소 높고 운용보수는 낮은 수준**
→ 운용보수 대비 판매보수가 **1.4배 수준으로 고착화**된 데 기인
 - * 판매보수(%) : [전체 펀드] 미국(0.3), 한국(0.352) / [주식형 펀드] 일본(0.48), 영국(0.48~0.8), 한국(0.561)
 - * 운용보수(%) : [전체 펀드] 미국(0.3), 한국(0.273) / [주식형 펀드] 일본(0.48), 영국(0.95~1.6), 한국(0.515)
 - * **운용보수 대비 판매보수 비율**: 영국 0.5배 / 미국·일본 1배 / 한국 1.4배
- 다만, **운용성과와 무관하게 판매·운용 보수가 결정됨**에 따라 **채감부담** 등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자자의 실망**을 초래
 -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성과연계 공모펀드 등을 도입('17.5월) 하였으나, 도입초기 단계로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

판매보수율 및 운용보수율 추이 (단위 :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9월
판매보수율(A)	0.673	0.627	0.546	0.479	0.456	0.425	0.354	0.352
운용보수율(B)	0.471	0.447	0.395	0.355	0.312	0.297	0.270	0.273
비율(A/B)	1.4	1.4	1.4	1.3	1.5	1.4	1.3	1.3

- ③ (정보 인프라 미흡) 투자설명서, 공시 등을 통해 펀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크게 미흡**
- **투자설명서** 등의 경우 **방대한 정보를 전문용어로 서술**(‘공급자 중심’의 정보제공)함에 따라, **실제 투자판단에 활용하기에 곤란**
 - * 운용인력, 수수료, 운용실적 등 방대한 내용(최소 50페이지 수준)이 전문용어로 서술되고 있어, 일반투자자에게 유용성이 떨어짐
 - **공시 등을 통해 운용사·매니저의 Track Record(예: 수익률)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투자자 이용이 극히 저조한 상황**
 - * 금융투자협회 공시 홈페이지의 메뉴당 일평균 16회 조회에 불과

- 9 -

- ④ (판매채널 경쟁 제한) 펀드 판매사들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좋은 펀드’를 선정·추천할 유인체계가 미흡**
- 영업망이 넓은 은행, 증권 등 **대형 금융기관 중심의 판매 구조로 경쟁이 제한**
 - 그동안 펀드 다모아 등 **온라인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
 - * 펀드 판매채널별 비중(% , '17.9월) : 은행(41.8), 증권(52.2), 직판(3.1)
 - 이로 인해, 판매사가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펀드를 추천하기 보다는 판매사의 이익을 우선할 유인**이 상존
 - 판매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계열사 상품 위주의 판매, 고마진 상품 권유** 등에 취약한 구조

[2] 사모펀드 시장 : 역동성 저하

◇ 진입 확대로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한편,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규제개혁도 지속 필요**

- ① (신규 진입 확대에 따른 우려) 경쟁 과열 가능성에 따른 투자자 보호 우려, 신규 플레이어의 시장 정착 애로 등 존재**
- **신규 진입 확대**로 경쟁이 촉진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자칫 **‘과열경쟁’ 가능성**에 따른 **투자자 보호 우려**도 존재
 - * 전문사모운용사(개수) : ('15년말)20 ('16.6월)64 ('16년말)91 ('17.9월)120
운용사당 평균 수탁고(억원) : ('15년말)3,558 ('16.6월)1,731 ('16년말)1,650 ('17.9월)2,079
 - Track Record 중심으로 시장이 운영됨에 따라 **신규 플레이어(Rookie)의 정착이 쉽지 않은 상황**
 - * 장기적으로는 이미 Track record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대형사 중심의 시장구조가 고착화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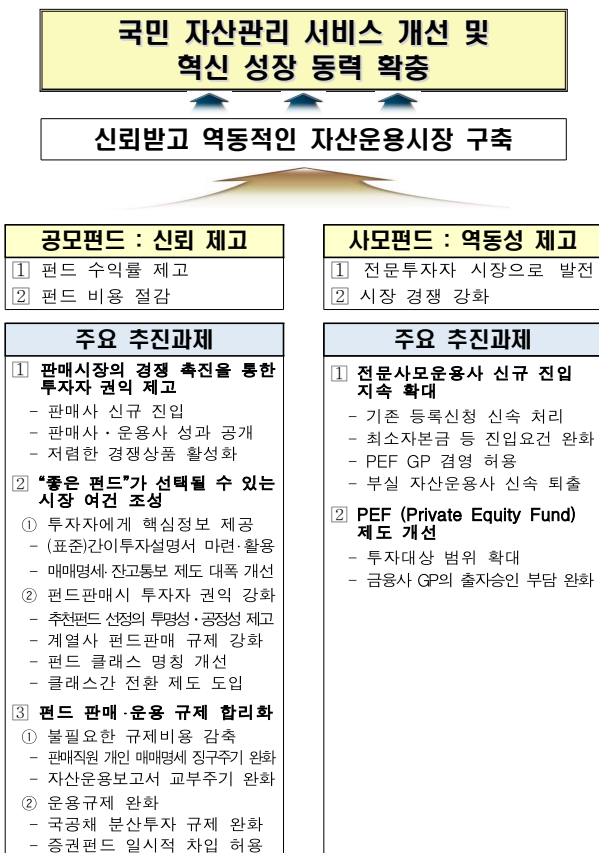
- ② (규제 잔존) 그간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 잔존 →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지속 필요**
- * (예) 금융사 GP의 PEF 설립시 금산법상 출자승인 부담 등

III. 향후 정책방향

- ◇ 그간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에 힘입어, '큰 틀'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는 평가
 - 다만, 일부 불필요한 규제가 잔존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 등 실제 '현장'에서 이에 상응하는 '관행 정착'에는 아직 미흡
- ◇ 따라서, 향후 정책방향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보완을 지속하는 한편, 관행 개선 등 '체감도 높은' 개혁에 집중
 - 공모펀드는 '투자자 신뢰 강화'라는 가치하에 (i)펀드 수익률 제고, (ii)판매 수수료·보수 등 펀드 비용 절감을 추진
 -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펀드를 활성화하는 한편, 인터넷 뱅크 등 진입을 허용하여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
 - 투자자가 '좋은 펀드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 및 운용능력에 정보 제공 인프라를 확충
 -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펀드 수익률 제고 등을 유도
 - 사모펀드 시장은 '전문투자자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용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
 - 사모운용사의 최소자본금 인하,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역량 있는 운용사가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현장 밀착형'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체감도 높은' 개혁을 추진
 - 투자자문대상 금융상품 확대,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 완화 등 규제개선 추진
 - 일임업자의 선관 의무 구체화 등 「투자일임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

- 11 -

IV. 추진과제



- 12 -

과제 1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 제고

- ◇ 공모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투자자 친화적 ('높은' 수익률, '낮은' 비용)으로 판매·운용되는 시장을 조성
 -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규제 합리화도 병행 추진

1 판매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한 투자자 권익 제고

- ◇ 펀드 판매시장의 고착화된 관행을 타파하고 투자자 중심으로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판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

① 판매사 신규 진입을 통한 경쟁 촉진

- (현황) 현재 펀드 판매시장은 상위 10개사에서 전체 펀드의 50% 이상(수탁고 기준)을 판매하는 과점적 구조
 - 판매사 간 서비스 및 가격의 차별점이 거의 없어 대부분의 투자자가 기존 거래 금융회사를 통해 펀드를 거래
 - (개선)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은행, 상호금융기관(농협, 신협 등) 등에 대한 판매사 신규 인가를 통해 판매사간 경쟁 촉진
 - * 북서울농협에 신규인가('17.6월), 향후 지속적으로 신규인가 예정
 - 우정사업본부¹⁾, 인터넷은행²⁾ 등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펀드 판매가 가능하여 펀드 판매시장에서의 '메기' 역할 기대
- 1) 정부기관이므로 인건비, 임대료 등의 사무관리비용이 적게 소요
2) 대면 상담과 투자 권유가 생략되어 저비용으로 펀드 판매 가능

- 13 -

② 판매사·운용사의 성과 공개(금투협회 보도자료 배포, 반기)

- (현황) 현재 판매사·운용사별 판매중인 개별 펀드의 수익률, 비용 등을 공시중(금투협회 공시시스템)이나,
 - 비교·분석 자료의 부재로 전문성이 미흡한 일반 투자자가 판매사·운용사 선택 시 참조하기에 곤란하여 이용률* 저조
 - * 메뉴당 일평균 16회 조회에 불과
- (개선) 판매사·운용사의 펀드 수익률을 유형별로(예: 액티브주식형 펀드 등) 비교·분석하여 주기적으로 공개(금투협회 보도자료 배포, 반기)
 - * 일임형 ISA의 경우 매달 금투협회에서 수익률을 분석하여 보도자료 배포
 - 펀드유형별 수익률 상위사(예: 10개사)를 공개하여, 판매사·운용사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유도

③ 보다 저렴한 비용의 경쟁상품(온라인펀드, ETF) 활성화

- (현황) 일반펀드의 경쟁상품으로 상대적으로 저렴¹⁾한 온라인펀드, ETF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²⁾을 시행중
 - 1) (온라인펀드) 대면상담·투자권유가 생략(ETF) 기초지수 단순추종(운용보수↓) 및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판매보수無)
 - 2) (온라인펀드) 신규펀드의 온라인펀드 설정 의무화, 창구용 펀드의 온라인 판매 금지, (ETF) 액티브 ETF 도입, ETF 중복상장 허용 등
 - 온라인펀드 상품이 확대되고 다양한 ETF가 출시*되는 등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추진 필요
 - * 기존 ETF를 포함하여 액티브 ETF, 업종섹터 ETF 등과 함께 300종목 돌파
- (개선) 온라인펀드, ETF 등 펀드의 경쟁상품을 지속 활성화하여 펀드비용 인하 유도

- 14 -

2 “좋은 펀드”가 선택될 수 있는 시장 여건 조성

◇ 투자판단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알기 쉽게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판매규제 강화 등을 통해 **투자자 권익**을 제고

[1] 투자자에게 핵심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

① 판매단계 : (표준)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핵심정보를 설명

- (현황) 투자비용, 운용사, 펀드매니저 등에 대한 정보는 투자판단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판매단계에서 설명이 부족
 - * '16년 투자자 조사결과(투자자보호재단), 펀드매니저(12%), 운용사(38%), 펀드비용(45%)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소수에 불과
- 상품설명서 기초자료인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가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되는 것이 하나의 원인

i) (투자설명서) 펀드 관련 방대한 내용(최소 50 페이지)이 전문용어로 서술되어 있어 일반투자자에게 유용성이 떨어짐

* 펀드 명칭, 연혁, 운용인력, 구조, 투자위험, 비용, 운용실적, 투자자 권리 등

ii) (간이설명서) 각종 정보가 열거식으로 나열되어 있어 일반투자자가 투자판단을 위해 참고하기에 한계(통상 4 페이지 내외)

- (개선) 알기 쉽고 핵심적인 (표준)간이투자설명서를 마련하여 이를 기초로 핵심정보를 판매과정에서 반드시 설명
 - ① 운용사·펀드매니저의 과거 수익률을 반영하고, 수익률·투자비용(보수·수수료 등)은 동종 펀드 평균과 비교
 - ② 복잡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보수·수수료 등의 비용은 전체 합산하여 단일 가격(one-price)으로 표시·제공
 - ③ 투자위험등급, 펀드 수익률 추이, 운용사·펀드매니저 정보, 투자비용 등 중요정보는 첫 페이지에 배치

▶ (필요조치사항) 기업공시서식(금감원) 및 표준 투자권유준칙(금투협회) 개정 등

- 15 -

② 판매 이후 : 투자자의 지속적인 투자판단 지원을 위해 매매명세 및 잔고통보 제도 대폭 개선

- (현황) 개별 투자자가 보유한 펀드의 내역 및 평가금액 등에 대한 매매명세(자본시장법) 및 잔고통보(금투협회 규정)를 매월 제공
 - 매매명세와 잔고통보 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주기 등에 큰 차이가 없어 중복되는 측면
 - * (공통) 수익률, 평가금액 등, (차이) 잔고통보는 환매예상금액, 설정원본 등을 제공하고, 매매명세는 매매내역, 예수금 현황 등을 제공
 - 많은 판매사가 실제 환매금액과 다른 수익률(환매수수료·세금 미반영), 평가금액(세금 미반영) 등을 제시하여 투자자 불만 초래
 - * 판매수수료, 세금 등을 모두 반영한 환매예상금액은 판매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 조회 가능한 경우 미제공 가능
- (개선) 매매명세·잔고통보를 일원화하고,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방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재편
 - 판매수수료, 세금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한 실질수익률과 환매예상금액*을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제공과 별개로 반드시 제공
 - * 월말 기준금액으로 업무처리 소요로 인해 시차 발생(SMS 등은 통상 5영업일)
 - 기존의 서면, 문자메시지 등 외 투자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한 스마트폰 앱(App)* 등으로도 제공토록 허용
 - * 문자 메시지(SMS, short message service)와 유사하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Push 기능을 통해 저렴하게 정보 전달

▶ (필요조치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70 및 금융투자업규정 §4-36, §4-37 개정 등

- 16 -

[2] 펀드판매에서의 투자자 권익 강화

① 판매사 추천펀드 선정에 대한 투명성·공정성 제고

- **(현황)** 투자자가 주로 기존 거래 금융회사의 투자권유 펀드에 투자하나, 판매사의 투자권유 상품 선정과정에서 투명성 미흡
 - 판매사가 투자자 입장을 감안하기 보다는 계열사 펀드¹⁾ 및 고위험·고비용 펀드²⁾ 위주로 추천펀드를 선정하는 사례 다수
- **(개선)** 판매사의 투자권유 펀드 선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추천펀드 선정·배제시 기준·사유를 함께 공시토록 의무화
 - * (현행) 추천펀드 선정시 기준·사유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시토록 의무화

▶ (필요조치사항) 표준 투자권유준칙 개정

② 연간 계열사 펀드판매 규모를 단계적으로 25%까지 축소

- **(현황)** 계열사 펀드 쏠림방지를 위해 계열사 펀드의 판매규모를 연간 펀드 판매규모의 50%내로 제한('13.4월~'19.4월, 2회 연장)
 - * 공·사모 모두 포함하되, MMF·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펀드 제외
 - 동 규제를 통해 시장전반의 계열사 쏠림현상은 완화¹⁾됐으나 일부 판매사²⁾의 경우 여전히 계열사 비중이 높은 상황
 - 1) 계열판매 비중(%): ('13년) 26.2, ('14년) 20.8, ('15년) 26.3, ('16년) 21.9
 - 2) '16년 기준 2개사의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은 40%를 초과
- **(개선)** 계열사 펀드 판매를 연간 판매규모의 25%로 축소하되, 시장부담을 감안하여 年 5%씩 단계적 축소('18년 45% → '22년 25%)
 - * 보험업권의 경우에도 계열사 보험 판매를 연간 판매규모 25%내로 제한
 - ※ 계열사 몰아주기 가능성이 낮은 클린클래스 등에 대한 예외적용 예정

▶ (필요조치사항) 금융투자업규정 §4-20 ① 개정

- 17 -

③ 이해하기 쉽게 펀드 클래스 명칭 개선

- **(현황)** 현재 하나의 펀드 내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다른 다양한 클래스(예: A 클래스, C 클래스 등)를 설정 가능
 - 그러나, 클래스 명칭이 영어 알파벳으로만 이루어져 명칭만으로는 클래스별 특징을 파악하기 곤란
- **(개선)** 투자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펀드 클래스 명칭 정비(예: A 클래스 → 장기투자형, C 클래스 → 단기투자형 등)

▶ (필요조치사항) 금투협회 규정 개정

④ 판매보수가 저렴한 클래스로의 전환 제도 도입

- **(현황)** 판매보수*에는 투자자문 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많은 투자자가 판매시점 등에 대한 자문을 받지 못하고 비용만 부담
 - * 펀드계좌관리, 투자자문, 매매명세·잔고통보 제공 등에 대한 대가
- **(개선)** 투자자가 희망시 투자자문이 없어 보다 저렴한 보수가 적용되는 클래스(온라인 또는 클린)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 온라인 펀드·클린 클래스의 판매보수는 일반펀드의 절반 수준 → 판매보수가 운용보수 대비 1.4배인 관행을 타파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대상] 투자자문을 통해 펀드 가입 후 저보수 클래스로 전환하는 문제(체리피킹[Cherry Picking])를 방지하기 위해 펀드 가입 후 일정기간(예: 1년)이 경과한 경우로 제한
- [세제 문제] 기준가격이 다른 클래스 간 이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최종 환매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도록 기재부와 협의 필요
- * (유사사례) 투자기간 경과에 따라 판매보수가 체감되는 CDSC 펀드(예: 1년차 1.5% → 2년차 1.0%)의 경우 최종 환매시까지 과세 이연(기재부 유권해석)

▶ (필요조치사항) 행정지도 마련·시행 및 기재부 협의(유권해석)

- 18 -

3 펀드 판매운용 규제 합리화

◇ 투자자 권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비용을 감축** 하고, **운용규제를 완화**하여 수익률 제고 유도

(1) 불필요한 규제비용 감축

①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 완화(분기 → 반기)

- (현황) 자산운용보고서를 보유펀드별(1인당 평균 2.7개)로 분기마다 교부하여 **운용사에게는 큰 부담**인 반면, **투자자는 스펀지** 인식
- (개선)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반기로 완화('15.3월 기발표)
 - * 미국·영국·홍콩·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연 2회 제공
- **최신 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월간 운용보고서**(p.1~2)를 **운용사·판매사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유도(일부 운용사는 기시행중)

▶ (필요조치사항) 자본시장법 §88 ① 개정

② 펀드판매 직원이 자기계산으로 거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의 징구 주기 완화(분기 → 年 1회)

- (현황) 은행·보험사 등 내 **금융투자업 직무 수행 임직원**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자기 계산으로 거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매분기 소속 회사에 제출
- 이에 따라, 은행 창구의 펀드판매 직원 등 **불공정 행위**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도 **매매명세 제출 부담**이 존재
- (개선) 펀드판매 직원 등 **불공정 행위**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 자기 계산으로 거래한 **매매명세 징구 주기 완화**(분기 → 年 1회)

▶ (필요조치사항) 자본시장법 §63 ① 개정

- 19 -

(2) 운용규제 완화를 통한 창의적 운용 지원

①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에 대한 분산투자 규제 완화

- (현황) 10% 분산투자 규제*의 예외로서, 국공채의 경우 개별 채권에 **100%(국채) 또는 30%(지방채, 특수채)까지 투자 허용**
 - * 펀드자산의 10%를 초과하여 동일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금지
- 다만,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5% 이하씩 분산투자**한 경우, 동일종목 증권에 **25%까지 투자**를 허용(25% 규제)하고 있으나,
- 국공채도 일반 증권과 마찬가지로 **5%씩 분산투자**해야 함에 따라, **중소형 펀드는 거래규모가 큰 국공채를 거래하기 곤란**
- (개선) 국공채는 안정성이 높은 만큼 **분산투자 규제를 완화**, **중소형 펀드의 국공채 매입 등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지원**
- 다만, 과도한 쏠림현상 방지 등을 위해 **25% 규제는 투자한도를 현행 대비 1/3 수준**(국채 30%, 지방채 10% 등)으로 조정

분산투자 규제 개선(안)

	원칙	예외	
		국채, 통안증권, 국가보증채	지방채, 특수채, OECD 국가채권
10% 규제	10% x 10개종목	100%	30%
25% 규제	25% x 2개종목 + 5% x 10개종목	(신설) 30%	(신설) 10%

▶ (필요조치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80 ① 개정

- 20 -

② 증권펀드의 일시적 차입 허용

- (현황) 공모 증권펀드는 대규모 환매 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차입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에 제약
- (개선) 운용담당자의 주문오류, 해외 증권시장 거래중단 등에 따른 일시적 자금수요로 인해, 펀드자산 매각이 불가피해지는 투자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일시적 금전차입 허용

▶ (필요조치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83 개정

③ 실물펀드 등의 금전대여 및 일정한도內 차입 허용

- (현황) SOC·선박·항공기 등 실물펀드에 대한 금전차입·대여 등이 허용되지 않아 운용에 제약(부동산 펀드는 기허용)
 - (개선) 실물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한 금전대여 및 일정한도內 차입을 허용하여 운용상 제약을 완화(법제처 심사중)
- * 민투법상 인프라펀드,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펀드는 자본금 30%내 허용

▶ (필요조치사항) 자본시장법 §94 개정

④ 공모펀드의 손익배분 차등화 허용 (선순위후순위 등)

- (현황) 하나의 공모펀드內 투자자간 손익 분배에 차등이 금지 (사모펀드는 허용)되어 있어 다양한 투자선호 반영이 곤란
 - (개선) 실물펀드 등에 한정하여 공모펀드도 투자자별 손익배분 차등화를 허용(법제처 심사중)
- * ① 실물펀드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기관·개인간 차등화된 투자 니즈(needs) 충족 목적), ② 운용사 등이 후순위 투자하는 경우

▶ (필요조치사항) 자본시장법 §187의2 신설

- 21 -

과제 2 역동적인 사모펀드 시장 구축

◇ 경쟁촉진,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전문가 투자시장'으로서 사모펀드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제고

1 신규 진입 지속 허용을 통한 경쟁촉진

◇ 투자자들이 경쟁과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능력있는 플레이어의 진입을 지속 유도하고, 추가 규제완화 추진

① 기존 등록신청을 신속히 처리

- (현황)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진입요건 완화 이후 등록신청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등록 소요기간이 지체된다는 일부 의견
- (개선) 금감원 내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심사 TF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등록신청(13건) 조속히 처리

② 최소자본금 등 진입요건 완화 (20억원 → 10억원)

- (현황) 전문사모운용사의 경우 '전문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일임업 대비 진입요건 과도
- * (최소자본금) 전문사모운용사 : 20억원 > 투자일임업 : 15억원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 시)
- (개선) 전문사모운용사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능력있는 Player들의 추가진입 확대 (최소자본금 20억원 → 10억원)

▶ (필요조치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271의2 개정

- 22 -

③ 전문사모운용사의 자유로운 PEF 설립 허용

- (현황) 전문사모운용사의 경우에도 PEF 설립을 위해 **추가적 자본금 요건(1억원)**을 갖추어 **별도의 GP 등록이 필요***
- * 현재는 16개 전문사모 GP 등록 중(5개 증권사, 5개 종합운용사 포함)
- (개선)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및 별도의 GP 등록 절차 없이 PEF 설립·운용 허용***
→ 투자목적별 **Vehicle** 선택이 가능하여 **운용 자율성 제고**
- * 전문사모운용사 설립요건이 PEF GP 대비 엄격한 만큼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GP 등록 없이 PEF 설립을 허용
- 기존 전문사모운용사는 신고만으로 PEF 설립 허용
- 신규 전문사모운용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설립·운용 허용

▶ (필요조치사항) 자본시장법 §249의15 개정

④ 부실 자산운용사의 과감하고 신속한 퇴출

- (현황) 전문사모운용사의 **시장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쟁이 심화**
- * 전문사모운용사(개수) : ('15년말)20 ('16.6월)64 ('16년말)91 ('17.9월)120
운용사당 평균 수탁고(억원) : ('15년말)3,558 ('16.6월)1,731 ('16년말)1,650 ('17.9월)2,079
- (개선)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 운용사는 과감하고 신속히 퇴출시키는 등 **사후 감독은 강화***
- * (예) 퇴출 절차 유예기간 1년 → 6개월, 위법여부 판단 연 1회 → 월 1회

- 23 -

2 PEF (Private Equity Fund) 제도 개선

◇ PEF 운용의 자율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진입·운용** 규제를 지속 개선

① PEF 투자가능 자산 범위 확대

- (현황) PEF는 기업지배 목적*으로 보통주, CB, BW 등에 한해 취득 가능하나, **전환우선주 등은 취득 가능 여부가 불명확**
- * 보통주 취득 또는 CB, BW 취득 후 전환권 등 행사를 통해 의결권 기준 지분율 10% 이상 투자 또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 (개선) CB, BW와 유사속성을 지닌 **금융상품***도 CB 등과 동일조건으로 **PEF 투자 가능자산에 명시적으로 포함**
- *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등

▶ (필요조치사항) 자본시장법 §249의12, 시행령 §271의15 개정

② 금융사 GP의 PEF 설립 시 금산법상 출자승인 부담 완화

- (현황) 여전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및 전문사모 집합투자업자 등 **금융회사들의 PEF GP 설립 증가 추세**
- PEF 출자승인 시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등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을 요구**하나,
- 타 업권과 달리 여전법상 신기사의 경우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등’까지 심사대상으로 규정하여 **실무적 부담 과다**
- (개선) 신기사 GP도 전문사모 집합투자업자 등과 동일하게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 (현행)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개선)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 (필요조치사항)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제15호 개정

- 24 -

과제 3 기타 현장 밀착형 제도개선 추진

◆ ‘금융현장’에서 제기되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개선하여, 일반국민의 ‘체감도 높은’ 개혁을 지속 추진

1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 완화

- (현황) 일임업자는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3개월마다 투자일임 보고서를 서면·이메일로 교부할 의무를 부담
 - 펀드, 신탁의 경우 투자자가 수령 거부시 운용보고서 교부 의무 면제
- 투자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잔고가 없는 경우 등 보고서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교부함에 따라 투자자 불편 발생
- (개선) 투자자가 서면으로 수령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잔고가 없는 경우 등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를 면제
 - 다만, 보고서 재교부를 요구할 경우 즉각 교부 재개
-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앱(App) 등을 통한 교부도 허용하여 보고서 수령 편의도 개선

▶ (필요조치사항) 자본시장법 §99 및 동법 시행령 §100② 개정

2 투자자문대상 금융상품 확대

- (현황) 금융상품 자문업자(자본금 1억원인 자문업자)의 경우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예금에 한정된 자문만 가능
 - ELS와 유사한 원금보장상품인 파생결합사채(ELB, DLB)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되어 포트폴리오 추천에 제약
- (개선)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자문이 가능하도록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자문 대상상품에 파생결합사채도 포함

▶ (필요조치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 25 -

3 선관의무 구체화 등 투자일임 모범규준 제정

◇ 일임업자의 선관의무 등을 구체화하는 「투자일임 모범규준」을 제정 → 투자자 보호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

- (현황) 자본시장법은 일임업자의 선관의무, 충실의무 등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영업행위 규정이 미비
- (개선) 자본시장법의 선관의무, 충실의무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범으로서 「투자일임 모범규준」을 제정
 - 금투업 규정 등에 흩어져 있는 일임업 관련 규정을 통합, 투자자(일반 및 전문 투자자) 유형별 행위 기준을 마련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 시험에 관한 규정, 표준투자권유 준칙,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해설서 등

< 참고 > 「투자일임 모범규준」 검토내용(안)

- ① (투자자 이익 최우선) 일임업자가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하여 투자자 자산을 일임 운용토록 규정
 - (예) 일임업자가 동일 유형의 펀드상품 등을 편입하는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조건(예: 수익률, 수수료)의 상품을 편입
- ② (중요사항 통지 의무 부과) 계약체결 후 투자와 관련된 중요 사항(예: 수익률 급감) 발생시, 고객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 부과
 - (예) 금융시장 변동으로 투자수익이 급락하는 등 중요사항 발생시 투자자가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일임업자가 이를 통지
- ③ (기록·보관 의무) 일임업자에게 투자 판단에 대한 기록·보관 의무를 부과하여 투자자 및 감독당국의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 비합리적인 투자가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투자자가 해당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

▶ (필요조치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62① 및 금투업규정 §4-77 개정, 「투자일임업 모범규준」 제정

- 26 -

V. 향후 추진 일정

과제 내용	추진계획	부처
☐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 제고		
판매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권익 제고	· 판매사 신규 진입	금융위 금감원
	· 판매사·운용사 성과 공개	금투협회
	· 저렴한 경쟁상품 활성화	금융위 금감원
좋은 펀드가 선택될 수 있는 시장여건 조성	· (표준)간이투자설명서 마련·활용	금감원 금투협회
	· 매매명세·잔고통보 개선	금융위 금투협회
	· 추천펀드 선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금투협회
	· 계열사 판매규제 강화	금융위
	· 펀드 클래스 명칭 개선	금투협회
	· 판매보수가 저렴한 클래스로 전환 제도 도입	금융위 기재부
비용감축 등을 위한 규제 합리화	·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 완화	금융위
	· 판매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징구주기 완화	금융위
	· 국공채 분산투자 규제 완화	금융위
	· 증권펀드의 일시적 차입 허용	금융위
	· 실물펀드의 금전대여·차입 허용	금융위
	· 공모펀드 손익배분 차등화	금융위

- 27 -

과제 내용	추진계획	부처
☑ 역동적인 사모펀드 시장 구축		
신규 진입 지속 허용을 통한 경쟁촉진	· 기존 등록신청을 신속히 처리	금융위 금감원
	· 최소자본금 등 진입요건 완화	금융위
	· 전문사모운용사의 PEF GP 겸임 허용	금융위
	· 부실 자산운용사의 과감하고 신속한 퇴출	금융위 금감원
PEF 제도 개선	· 의무투자비율에 포함되는 투자대상 범위 확대	금융위
	· 금융사 GP의 PEF 설립 시 금산법상 출자승인 부담 완화	금융위
☑ 기타 현장 밀착형 제도개선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 완화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18.下)	금감원 금융위
투자자문대상 금융상품 확대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18.下)	금융위
투자일임 모범규준 제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투업규정 개정('18.下) · 투자일임업 모범규준 제정('18.下)	금융위 금감원

- 28 -